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2. 3(목) / 총3매(본문3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장우철, 사무관 홍승희, 이중곤 ·☎ (044) 201-4129, 332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'20.12.3., 조선일보) >

- ◆ 김현미가 만든 ‘빡’,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% 적다
 -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, 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.2만 가구에 불과
 -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

□ ‘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, 이에 따라 ‘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.

* 서울 APT 착공 물량 : ('08~'12) 2.5 ('13~'16) 3.3 ('17) 5.1 ('18) 4.5 **(‘19) 5.4**

< 연평균 주택·아파트 인허가 물량 >

(단위 : 만호)

	전국			수도권			서울		
	'08~'12	'13~'16	'17~'19	'08~'12	'13~'16	'17~'19	'08~'12	'13~'16	'17~'19
주택	45.5	61.2	56.5	24.9	29.6	29.1	6.6	8.0	8.0
아파트	31.4	41.7	41.7	17.7	18.9	20.8	3.8	3.5	4.8

- 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'17년 「주거복지로드맵」을 통한 공공주택 105.2만호 공급 발표, '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「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」 발표, 금년 5.6대책 및 8.4대책, 11.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【現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】

- 주거복지로드맵('17) :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.2만호 공급(~'22년)
- 공공임대 70.2만호, 공공지원 20만호, 공공분양 15만호
-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('18) :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
- 주거복지로드맵 2.0('20) :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'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
- 5.6대책('20) : '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,
'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+ α 수준의 주택 공급
- 8.4대책('20) : '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(신규 공급 13.2만호)
- 11.19대책('20) : '22년까지 전국에 11.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

- 6.17 대책과 7.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,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정부는 8.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,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, 공공재개발·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- 금번 발표한 「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」(11.19)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, 민·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□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'21~'22년 수도권·서울에는 예년('10~'19)보다 각각 年 4.9만호, 1.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.

○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.6만호(예년 대비 4.3만호 증가), 서울은 연평균 3.9만호(예년 대비 0.5만호 증가)가 공급됩니다.

□ 특히 '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.

○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, '23~'27년 동안 아파트는 '11~'22년보다 각각 44.2%, 59.5% 늘어난 연평균 22.2만호, 5.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수도권 아파트: (2011~2022년) 연평균 15.4만 호 → (2023~2027년) 연평균 22.2만 호

* 서울 아파트: (2011~2022년) 연평균 3.7만 호 → (2023~2027년) 연평균 5.9만 호

○ '13~'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'17~'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,

- '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'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'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.

* 공공택지 지정실적(만호) : ('13) 0.1 ('14) 0.0 ('15) 0.5 ('16) 3.0 ('17) 0.8 ('18) 5.5 ('19) 14.6
공공택지 인허가(만호) : ('13) 13.1 ('14) 15.3 ('15) 22.0 ('16) 18.9 ('17) 15.4 ('18) 13.9 ('19) 16.0

□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,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○ 앞으로도 꾸준히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,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129), 이종곤 사무관(3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